광주·전남 교육감 신년 인터뷰

안 순 일 광주시교육감

"3~5월중 자립형사립고 지정"

공부방 확대 교육격차 해소

능력 위주 인사 조직 새바람

—올해 중점 사업으로 '학생 중심 U(유비쿼터스)-러닝 교육도시 건설'을 내세웠는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을 통해 글로벌 스타 지도자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4개 영역으로 나눠 추진되며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진단·육성하기 위한 재능진단 분야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실수업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 방과 후 가정학습, 보충·심화학습 등 학생 자율학습 지원, 교원·학부모 연수, 단위학교 무선인터넷 완비 등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지역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데 대책은 뭔가.

▲지역 내에 외국어고나 과학영재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 영재 교육기관이 없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취임 후 외국어고 설립을 추진 중이며, 자립형 사립고 역시 관계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빠르면 3~5월 사이 공모를 통해 학교를 지정하고, 2010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투자(돈)와 성적이 비례한다고 할 정도로 교육 불평등이 심각한데.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30개교에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올해에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보다 34억원이 증액된 44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추후 관련 예산을 더 증액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영어캠프와 영어체험센터·영어전용교실 등 다양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단행한 교육청 인사가 사상 최대 규모인데다 파격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혼란은 없는 지.

▲장기 근무에 따른 업무 침체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따라 처음 적용한 인사다. 따라서 과장급 대부분이 자리를 옮길 정도로 큰 규모의 인사가 됐다. 특히 이번 인사에선 연공서열보다는 경력과 업무 능력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한 만큼 혼란보다는 광주교육의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자신한다. 앞으로도 철저한 능력 위주의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놓겠다.

—지난해 청렴도가 최하위로 나왔는데.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는 인사분야에서 10점 만점을 받는 등 전국 평균을 크게 넘어섰다. 다만 외부청렴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외부 컨설팅을 통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뒤 과감한 제도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패통제시스템을 강화해 청렴의식이 일선 교육현장까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 장 환 전남도교육감

"농어촌 소규모 학교 특화 지원"

초·중 방학기간 학력 보충

15개교 업체 연계 직업교육

—2009년 역점 교육 정책은 무엇인가.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창조적 수용과 '전남형 교육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이 많은 전남의 경우 전체 학교 수의 43%가 소규모 학교다. 따라서 새 역점사업으로 소규모 학교를 독립형·협력형·특화형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특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초·중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 또, 교육복지의 확대 차원에서 면 단위 중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 무상 지원, 무상 급식 실현, 그리고 학비 지원 대상도 차상위층으로 넓히겠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학력 미달 학생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와 함께 학력 미달 제로화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겠다.

또,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방학기간에 기본학력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특히 외국어 교육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외국어 교육기관과 지역별 외국어 체험센터 등 인프라를 풀 가동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학생 논술캠프, 청소년 해양교실·과학교실 운영 등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등도 적극 육성하겠다.

기숙형 공립학교의 운영기반 조성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과제다. 이와 함께 전문계 고교 특성화 사업 대상을 15개 학교로 확대해 산업체와 직결되는 직업교육도 적극 지원하겠다.

—인간 교육을 역점 과제로 선택했는데.

▲전남교육의 지표는 '세계와 미래로 웅비하는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이다. 교육에서 인성 교육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가꾸기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하겠다. 남을 배려하는 행동 습관화 지도와 효사랑 실천 운동, 학생 개인별 인성·심리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남을 배려하는 인격체로 키워내겠다.

또 학교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특화 운영하고, 문화예술 체험장 등의 운영을 통해 감성 중심 교육을 실천하겠다.

—신청사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광주 시대를 접고, 오는 3월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로 이전한다. 전남도교육청이 도민의 곁으로 찾아가는 뜻 깊은 일인 만큼 신청사 시대를 전남교육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 단순한 이전을 넘어 교육 현장에 한발 더 다가서는 도교육청으로 거듭나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부 "5+2 재조정 대신 자동차 부품산업·R&D특구 사업 광주 배정 검토"

市·정치권·지역민 결집

미래 성장동력 확보 성과

정부가 '5+2 광역경제권'의 권역을 유지하는 대신 광주시에 자동차 부품산업과 R&D특구 등 성장동력 사업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촉구해온 광주시와 정치권, 지역민들의 결집된 여론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사업에서 전북에 국책 프로젝트인 '새만금 사업'을 주는 대형 사업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간접 시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5+2 광역경제권' 구상에서 호남권에 편성된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5+2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계획서를 제출치 않는 등 사업 참여를 강력 거부해왔다. 이는 전국을 7개 경제권으로 나눈 5+2 광역경제권 정책이 호남에 1개 권역(호남권), 영남에 2개 권역(영남권·대경권)을 두고 있어 영·호남간 산업·경제 격차를 심화할 것이다는 주장이었다. 즉, 수십년간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한 호남권이 또다시 소외될 수 있다는 절박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특히 광주시는 지자체로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5+2 경제권의 재편을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해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5+3'으로 권역을 재수정하라"며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광주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반발 움직임이 격화되자 한 때 신재민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내세워 선도산업 참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5+2 광역경제권 재편 없이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5+2 권역 재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민주당은 정부의 30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계획과 관련한 2009년 예산안 철회를 정부에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18명은 지난해 10월16일 정부와 청와대에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의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던 5+2 광역경제권 문제는 광주시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달 22일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첨단부품 소재산업이나 신에너지 사업 등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거점산업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광주시민이 납득할만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시하라"고 제안,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다.

김윤석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뒤늦게 나마 다행이다"며 "정부가 광주시에 자동차 부품산업과 R&D특구 등 성장산업을 집중배치해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보이는 등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통령은 벙커에서, 공무원은 현장에서

이대통령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 첫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첫 주재하고 회의체 운영방식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한 분야별 대책 등을 논의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예정대로 내일 첫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린다"면서 "이 대통령이 회의 주재를 앞두고 오늘 청와대 지하 벙커에 마련된 비상경제상황실을 직접 둘러봤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지하 벙커를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과잉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다"면서 "사실 청와대에 공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동안 실무 공무원들은 현장을 파고들며 정부 시책을 설파하고 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6~7일 전남도와 광주시를 방문해 정부의 재정 운용계획을 설명하며 "지금 한국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있다"며 공직자들에게 경제난 극복에 전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7일 전남도청에서 주요 농정방향을 설명했다.

유례없는 경제난에 대응해 CEO형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이같은 노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